

1. 총평

총평 및 아래 분석 내용은 알파행정학 교재와 강의로 공부했던 수험생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2021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는 2020년 국가직 9급에 비해 훨씬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는 20번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이 있으나, 알파행정학 교재 및 강의에서 매우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우수, 85점에서 90점까지는 보통, 8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4	개념문제	1
정책학	3	이론문제	12
조직이론	5	법령문제	6
인사행정론	2	학자문제	-
재무행정론	3	사례문제	1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1		

(1)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본다.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2)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개념, 이론, 법령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4. 문제의 난이도 분석

중상	20.
중	4, 5, 6,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중하	1, 2, 3, 7, 8, 13,

(1) 20번 문제의 경우, 페리와 와이스(Perry & Wise)의 입장을 묻는 문제로서, 기존 7급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나, 9급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으나 알파행정학 교재와 문제집 그리고 강의를 통해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2) 나머지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다만, 2022년 국가직 시험부터는 9급 시험에서도 전공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5. 당부 사항

- 1) 행정학개론 시험의 기본은 기출문제 내용의 완벽한 이해와 암기이다. 다만, 20번 문제처럼 일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따라서 고득점을 통한 안정적 합격을 위해서는 기출문제 외에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암기를 병행해야 한다.
-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외부효과 발생
- ② 시장의 독점 상태
- ③ X-비효율성 발생
-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해설] ③(X). X-비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며, 정부실패와 관련된 내용이다. X-비효율성은 정부의 독점적 성격, 종결메커니즘의 결여, 산출물 측정의 곤란성,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구 분	공적 공급(조직)	공적 유도(보조금)	정부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		
불완전경쟁			○
자연독점	○		○
외부효과 발생		○	○
정보의 비대칭성		○	○

<정부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구 분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X-비효율, 비용체증	○	○	○
사적 목표의 설정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58-67. 핵심체크, pp.26-28.

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해설] ④(X). 조직목표는 조직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조직목표는 조직활동의 방향 제시, 조직구성원들의 일체감 형성 및 동기유발,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 제공,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한다.

<조직 목표의 기능>

- (1) 조직 활동의 방향 제시 : 조직목표는 조직이 추구하는 미래의 상태를 밝혀줌으로써 조직구성원들에게 방향감과 행동기준을 제공한다.
- (2) 동기유발 : 조직목표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일체감을 느끼고 조직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 (3) 정당화의 근거 : 조직목표는 조직의 존재 그 자체와 조직활동을 사회 내에서 정당화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 (4) 조직평가의 기준 : 조직목표는 조직의 성공도와 그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 (5) 조직설계의 준거 :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59-260, 379. 핵심체크, pp.110, 166.

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2021 국가9급

- ① 태스크 포스 ② 프로젝트 팀
③ 네트워크 조직 ④ 매트릭스 조직

[해설] ①(X). 태스크 포스는 본래 군대 용어로서 기동부대를 의미하였으며, 특별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임시조직으로서, 과업이 완성된 후 해체되는 조직이다.

②(X). 프로젝트 팀은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임시적·동태적 조직을 말한다. 즉,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조직 내의 여러 부서에서 관련자들을 차출하여 형성된 조직으로, 목표가 달성되거나 과제가 해결되면 해체된다.

③(0).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이다.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중심 조직은 전략·계획·통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생산 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한다.

④(X).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팀을 혼합한 이중구조적 조직(장방형 조직, 입체적 조직)이다. 즉, 매트릭스조직은 기능구조(U형)와 사업구조(M형)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이다.

[정답] ③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12-419, 핵심체크, pp.183-185.

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 국회의 국정조사
- ㉢.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 ① ㄱ, ㅋ, ㆁ, ㄷ
② ㄴ, ㄷ, ㄹ, ㄱ
③ ㄴ, ㄹ, ㄱ, ㅇ
④ ㄴ, ㄹ, ㅁ, ㅇ

[해설] ④(0). ‘ㄴ, ㄹ, ㅂ, ㅇ’은 외부통제에 해당하고, ‘ㄱ, ㄷ, ㅁ, ㅅ’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통제 주체에 따른 분류 : 내부통제와 외부통제(Gilbert의 분류)〉

구 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 식	● 행정수반(대통령) 및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 계층제(상관)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의한 통제 ● 정부업무평가(구 심사평가)에 의한 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 동료 집단의 평가와 비판에 의한 통제 ● <u>대표관료제</u> ● 공익	● 민중통제 ● 시민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여론, 매스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제 ● <u>정당에 의한 통제</u>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938-943, 핵심체크, pp.425-430.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①(O).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O).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X).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794-795, 922. 핵심체크, pp.362-363, 418.

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②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④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설] ①(O). 규칙적 오류(일관적 오류)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후한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대화 경향이나 엄격화 경향을 방지하는 방법인 강제배분법을 이용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다.

②(O). 막바지효과(시간적 근접오류, recency error)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말한다. 시간적 근접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평가센터, 목표관리제 평정, 주요사건기록법 등이 활용된다.

③(X). 관대화 경향은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평가대상자와 불편한 인간관계에 놓이는 것을 피하려는 상황에서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관대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평정결과를 공개한다는 표현을 잘못이다.

④(O).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한다. 연쇄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하는 방식, 즉 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피평정자 전원을 평가한 후 다음 요소를 평가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596-598. 핵심체크, pp.267-268.

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절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해설] ①(O). 테일러는 관리자가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Taylor는 1898년 베들레헴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재료들이 동일한 샵으로 작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목탄의 경우는 한 샵의 무게가 4파운드, 철광석의 경우 40파운드에 이르렀다. 테일러는 이를 분석하여 취급하는 재료에 따라 샵 모양과 크기를 달리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인당 하루 취급량을 16톤에서 59톤으로 늘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종업원 수를 500명에서 140명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종업원의 일인당 임금을 60% 이상 인상해주고도 자체 취급비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임금, 저비용).

②(X).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나 자기 실현 욕구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O). 과학적 관리론에서 관리자는 과학적으로 노동자를 선택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와 인력의 적절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④(O).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즉, 과학적으로 숙련된 사람이 수행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작업 방법을 골라내어 이를 기준으로 표준시간과 표준동작을 정한다(Stop Watch 활용).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15-116. 핵심체크, pp.49-50.

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해설] ①(O).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②(X).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이고, 뉴거버넌스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X).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결과이고,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④(X). 신공공관리의 관리기구는 시장(market)이고, 뉴거버넌스의 관리기구는 연계망(network)이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기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 기구	시장	연계망
관리 가치	결과, 효율성(능률성)	과정(신뢰), 민주성(정책 효율성 확보)
정부의 역할	방향잡기	방향잡기
	방향잡기 중심에 정부 존재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중시
관료의 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경쟁(시장 메커니즘)	협력체제(신뢰)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시민·기업 참여)
관리 방식	고객 지향	임무 중심, 시민 지향
분석 수준	조직 내	조직 간
행정의 성격	공사행정신일원론	정치행정신일원론
Schachter 이론	정부재창조론	시민재창조론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171. 핵심체크, pp.70-71.

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 국가9급

-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해설] ㄱ.(O).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X).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은 분배정책(일부 재분배정책 성격도 있다고 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은 분배정책에 해당하나,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ㄷ.(O).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며, 이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ㄹ.(X).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나,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ㅁ.(O).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23-225. 핵심체크, pp.93-94.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감사원이 감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해설] ①(O).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O).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독립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X).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④(O). 국회는 감사원이 감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이 감사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의 결산심의 완료	다음 연도 정기회 개회 전

[정답] ③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707-734. 핵심체크, pp.321-332.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1 국가9급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 ② 품위 유지의 의무
- ③ 복종의 의무
- ④ 성실 의무

[해설] ①(X).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상 의무	직무상 의무		
●선서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대통령 허가 필요 ●품위 유지(직무 내외 불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성실 ●친절·공정 ●종교중립 ●복종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퇴직 후에도) ●청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재산등록 및 재산 공개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부패 신고 및 처리 - 내부고발자 보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국민감사청구제도 ●고충민원 조사·처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28, 636-644. 핵심체크, pp.281-287.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2021 국가9급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해설] ④(X). 예산이 결정되고 집행된 후 결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3년의 주기를 거친다.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은 2022년에 이루어진다.

예산결정(FY-1년)		예산집행 (Fiscal Year)	결산(FY+1년)		
예산편성	예산심의		결산작성	결산확인·검사	결산심의
행정부	국회	각 관서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 ①(O).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은 예산편성과정에 해당하며, 2021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②(O).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은 예산집행과정이며, 2021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 ③(O).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며, 2021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655, 707-734. 핵심체크, pp.294, 321-332.

13.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④(X).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집행>

(1) 정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680. 핵심체크, p.305.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①(O).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자본이 부족할 때,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②(O). 철도, 가스, 전기 등과 같은 자연독점적인 사업은 사기업에 맡길 경우 독점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③(O). 공기업의 정당화의 근거는 시장실패의 시정, 경제적 수혜구조(분배구조)의 개편, 장기적 경제계획의 지지, 사회주의적 경제원리의 도입 등과 관련된다. 즉, 공기업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X).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감사원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24-426. 핵심체크, pp.189-190.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② 매클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④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해설] ①(X).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동기는 직무수행동기가 아니라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동기를 말한다. 과소보상뿐만 아니라 과대보상 지각 시에도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가 나타난다. 다만 과대보상보다 과소보상으로 인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더 예민하게 나타난다.

②(O). McClelland의 성취동기(욕구)이론은 Maslow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O).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브룸의 기대이론 : $M(\text{motive}) = f(\text{expectancy}, \text{instrumentality}, \text{valence})$ >

- (1) 기대(expectancy) :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이것은 보통 주관적 확률로서 표시된다($0 \sim +1$).
- (2) 수단성(결과에 따른 보상, instrumentality) : 1차 수준의 결과(성과)가 2차 수준의 결과(보상)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의 강도를 뜻한다($-1 \sim +1$).z
- (3) 유인가(유의성, 보상의 매력성, valence) : 특정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이 갖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n \sim +n$).

④(O). Alderfer는 Maslow와 달리 욕구 만족 시 발생하는 욕구 발로의 전진적·상향적 진행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로 인한 욕구 발로의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구성원들은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440-450. 핵심체크, pp.199-203.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해설] ①(X).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는 도구요인(instrumentation)에 해당하며,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②③④(O). ②는 표본의 비대표성, ③은 호손효과, ④는 크리밍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서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재적 요인	① 선발(선정)요인	① 표본의 비대표성 - 크리밍효과
내재적 요인	② 역사적 요소	②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③ 성숙요인	③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④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④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 호손효과
	⑤ 상실요인	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⑥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⑦ 측정요인	
	⑧ 측정도구요인	
	⑨ 회귀인공요인	
	⑩ 확산효과(오염현상)	

[정답] ①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328-330. 핵심체크, pp.140-141.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해설] ①②(O).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비례대표의원 제외)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③(O).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경우, 주민의 의사에 벗어나는 정책을 펼치거나 행동을 할 경우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④(X).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비례대표의원 제외)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 사·도의원과 지역구 자치구·사·군의원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828-830, 핵심체크, pp.378-379.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해설] ②(X).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담론의 결과로 본다. 한편,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본다.

관 점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실증주의	민주주의, 실증주의·현상학·비판이론·신행정론·포스트모더니즘 포괄
합리성과 행태모형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	전략적·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
공 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 반응 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릇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동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	계층제적 - 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반응	시장 지향적	다면적 -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 축소, 이데올로기적 욕구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172-173, 핵심체크, pp.71-72.

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 국가9급

-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해설] ㄱ.(O). 할인율은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할인율이 높을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X).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 계산 시 실질적 편익(real benefit)이 아닌 금전적 편익(pecuniary benefit)은 제외시켜야 한다. 실질적 편익이라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모두 편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X).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O). 내부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할인율이 결정되었을 경우	예산의 제약이 없을 경우		순현재가치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규모 동일	순현재가치
		규모 상이	순현재가치(일반적) + 편익비용비
할인율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내부수익률

[정답] ②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p.269-274, 핵심체크, pp.113-114.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가9급

-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페리와 와이스(Perry & 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해설] ①③(O). 공공봉사동기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공무원들의 이타적 동기를 말한다.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 부문의 인력들이 사적 부문과 다른 동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따라서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②(O).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X). Perry & Wise는 공공봉사동기를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합리적 차원 (이성적 계산)	합리적 차원은 공무원 개인 효용극대화 동기와 관련된다. 자신의 자아실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정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 호감도와 매력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
규범적 차원 (공익 의무감)	규범적 차원은 본질적이고 이타적인 내용으로 의무감에 바탕을 둔 동기이다. ●공익봉사의 욕구 ●의무와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사회적 형평의 추구
감성적 차원 (감정적 접근)	감성적 차원은 이성이나 의무감이 아닌 감정적으로 생기는 동기이다.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한 몰입 ●선의의 애국심

[정답] ④

☞ 참고 : 2021 7·9급 알파행정학, p.447, 핵심체크, p.202.